



2013

국토교통부 · 새만금개발청

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

확인 국정감사

국회의원 이 명 수 [충남 아산]

## □ 현 실태와 문제점 – 단기 현안 집중, 미래 대비 소홀

- 행정 · 공무원 위주, 고객보다 업자 위주, 규제 · 효율 위주 업무추진
- 기후변화 등 새로운 업무에 총론적 대응 한정, 체계적 대비 미흡
- 新기술 · 新기법 등 첨단분야 증가 추세이나, 「쇄신」 노력 자체 부족
- R&D 투자비, 人力 부족, 중복 · 상충 연구, 실효성 낮은 연구 등 지양

## □ 개선대책 – 지속 가능한 중장기 비전 준비, 적극 대응

- ① 새로운 국토행정 수요제 부응, 실질적인 「패러다임」 전환 적극 추진
- ② 국토교통업무의 출발과 귀결 「국민」에 집중, 「수요자 중심」 체제 확립
- ③ R&D 투자 강화하되, 연구기관간 연계성 · 체계성 강화 · 성과물 활용도 제고

➡ 새정부의 「창조경제」, 「국민행복시대」 이끌고 가는 기수 역할 제고

# 4대강 사업 완공 이후 유지관리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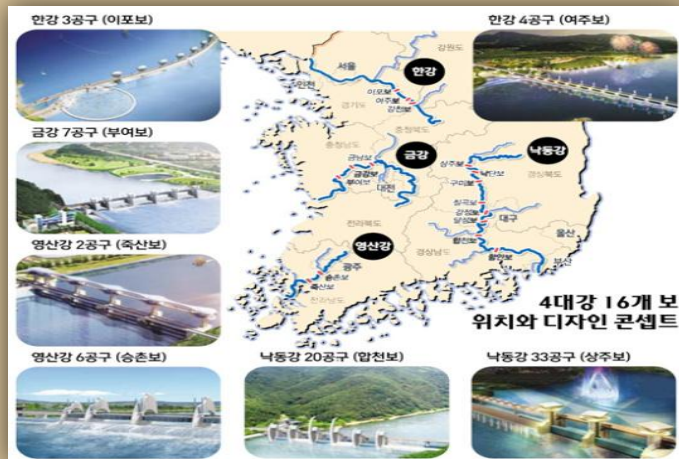
국회의원 이명수  
www.mslee.co.kr

## □ 4대강 사업 관련 시설 · 국토부 등 협조 강화


○ 상시 점검 및 관리체제 강화 세굴현상 등 부실공사 의혹 부분 해소 노력

## □ 「수질 오염」 방지에 최선 (환경부 등 협조)

○ 오염물질 유입 차단 · 처리 시설과 주변환경 개선 추진 (습지 등)



➡ 감사원 감사결과 및 시민단체의 4대강 유지관리 지적에 대한  
철저한 조사 ·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완 필요

 상임위 차원, '산하 「공기업혁신특별위원회」' 구성 제안

## ○ 현황 및 문제점

- 국토부 산하 5개 기관, 합계 216조 여원( '13現)
- 향후 '부채 지속 증가' 예상, 기관별 '개선입장' 만 되풀이

### ▶ 공공기관 부채현황 (단위: 억원, %)

순위	기관명	2011년	2012년	증감액	증감율
1	한국토지주택공사	1,305,712	1,381,221	75,509	5.8
2	한국도로공사	245,910	253,482	7,572	3.1
3	한국철도시설공단	155,674	173,406	17,732	11.4
4	한국철도공사	134,562	143,209	8,647	6.4
5	한국수자원공사	125,809	137,779	11,970	9.5

➡ 부채 차원의 '잠재적 리스크 점검 및 혁신적 자구책' 강구 필요

## □ 量的 팽창으로 과잉 · 과다 · 과열 대상

- 국토교통분야 중, 시장경제논리와 규제완화 속에 과잉 · 과다 · 과열 설치로 국가전체적 비능률, 갈등 · 혼선 · 혼란 · 비리 등 초래
- (예) 건설회사, 엔지니어링, 건축 · 설계 · 측량 사무소, 자가용, 공기업 자회사, 시행사, 대학, 원룸, 위 · 수탁(Outsourcing), 용역회사 등

## □ 합리적 규제 및 조정 방안

- 각종 신고제 · 등록제 → 면허제 · 인가제로 전환(시장경제논리 축소)
- 공급측면 이외에 「수요측면」 고려, 공무원 아닌 「국민」의 입장 중심
- 2대 이상 보유시 「차고지 증명제」 등 「자가용 보유 규제」 강화
- 위 · 수탁 (Outsourcing)의 경우, 국토부 사전 승인 등 사전규제
- 최저가 낙찰제 등 입찰제도 개선 및 하도급 규제 · 강화 등 촉진

## □ 현황 및 문제점 – 기술 · 시험 · 연구 분야 인력 · 관리 · 감독 등 부족 · 미흡

- 국토부 · 산하기관 · 공기업 등 기술 · 시험 · 연구 분야 임직원 상대적으로 사기저하
- 핵심부품, 제조품, 납품자재 등 관리 · 감독 체계 미확립으로 「안전문제」 상존
- 시험 · 연구 내용 및 성과물의 「활용도」 미흡, 연구를 위한 연구 다수

## □ 개선대책 – 전반적으로 「기술분야 人力」 중심, 안전관리 강화

- 기술분야 공무원, 연구원, 임직원(공기업) 등 인사상 중용 등 사기양양
- 국토교통분야, 기술분야 관련 인력 · 예산 확충 및 관리 · 감독 강화
- 기술 · 시험 · 연구 관련 안전문제 제기시 처벌 강화 등 보완 · 개선  
(예) 불량 납품으로 안전사고 유발시 처벌강화(납품배제, 형사처벌 등 법개정)

- 국토교통 R&D, 연구개발 투자 비해 가시적 성과 · 실질적 실적 미흡
- 기술이전 및 상용화 되지 않는 「기술휴면화 현상」 누적 상태 지속
- 후발국 중국의 기술수준 해마다 발전, 우리와의 기술격차 점점 좁혀져

## ▶ 주요 선진국 건설 · 교통 분야 기술수준 (KISTEP 2012 기술수준평가)



- 개선대책 – ‘선도형 기술개발’ 위한 전반적인 용역 관리 체계 강화
- 통합 심사위원회 구성 : 용역여부, 연구중복 · 상충 등 심사 후 용역의뢰 제도화 ※ 퇴직자 근무하는 용역기관 제한, 국책기관 활용 권장
- 기술용역결정시 공개입찰결정원칙, 학술용역은 수의계약 가능
- 용역 성과물 미활용, 용역내용상 오류 · 오차가 큰 경우, 사후 책임 · 제재 의무화

## □ 현황 및 문제점

- 성수대교 붕괴사고( '94.10)이후 「시특법」 제정 등 안전관리 수준제고
- 그럼에도, 후진국형 인재사고 지속, 건물고층화 등 위험요인 증대
- ▶ 아직, 안전의식 미흡, 안전 투자 부족, 관련 기술인력 양성 등 소홀

## □ 개선 대책 - 전반적으로 안전관리 의식 및 체계 강화

### ① 시설물 안전기준 강화(부문별) 및 체계 확립

- 시특법상 「최소한」 기준 제고, 신축공사와 다른 유지관리상 별도의 품셈 필요

### ② 시설물 유지관리 투자 확대, 법적 점검대상 증대

- 건설투자중 유지관리 투자 : 이태리 57%, 영국38%, 독일26%, 한국8%

### ③ 유지관리 기술과 공법 향상, 기술자 교육 · 자격제도 등 전반적 보완



## □ 현황 및 정책 제도상의 문제점

- 역대 정부별 新임대주택정책 추진으로 對국민 혼란 가중
- 전국 1,038,135채 건설 : 국민 · 영구 · 50년 · 5년 · 전세 · 10년 · 사원임대 순
- 경기(25%), 서울(19%), 전남 · 경남(각 6%), 광주 · 부산(각 5%) 순
- 지자체와 LH의 임대주택 공급물량 상대적 감소추세
- 임대주택명칭의 법률상의 불일치 및 복잡한 법체계 문제
- 입주자 선정시 투명하고 공정한 소득파악 부실, 미흡
- 도시 외곽에의 택지공급, 저소득층 집단거주지 낙인 등

※ 대학생 기숙사 건설 참여 적극추진 (주택기금 활용 등)

➡ 과감한 서민 임대주택 공급 정책 제시, 민간기업 참여시 인센티브 강화  
‘단일 법령체계, 공급대상 선정의 선명성 · 입지 등 개선’

## □ 하자 심사 조정 신청건수 증가추세 (9.30 기준)

구 분	계	심사 조정신청	전화/인터넷 상담	위원회 운영
'12년 실적	2,239건	836	1,357	46
'13년 실적	2,777건	484	1,884	45

-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 「홍보」 부족으로 소송청구 사례 다수(주민부담)
- 하자심사·분쟁조정결과 통보 후 후속조치 등 미이행 상당

## □ 개선·보완 방안

- ① 분쟁조정결과 미이행시, 규제·처벌 등 법적 「실효성」 확보
- ② 심사의 공정성·객관성 확보 및 민원인 편의성 제고 강화
- ③ 분쟁조정 관련 건축상 제도적 개선사항, 법규에 반영토록 조치 등

- 
- A collage of logos from various South Korean government agencies and organizations, arranged in a grid-like fashion. The logos include:
- Keit**: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(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)
  - KOTI**: 한국무역예측지원센터 (Korea Trade Forecasting Center)
  - kfri**: 한국식품연구원 (Korea Food Research Institute)
  - 캠코**: 한국자산관리공사 (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)
  - KSD**: 한국예탁결제원 (Korea Deposit & Finance Clearing Corporation)
  - KOFIC**: 영화진흥위원회 (Korean Film Council)
  - NIA**: 한국정보보호위원회 (National Intelligence Agency)
  - KCCCA**: 콘텐츠산업정보포럼 (Content Industry Information Forum)
  - 한국관광공사**: Korea Tourism Organization
  - 국립공원관리공단**: National Park Service
  - RDA**: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(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, National Institute of Food Science)
  - 대한적십자사**: 대한적십자사 (Red Cross of Korea)
  - 한국소비자원**: Korea Consumer Agency
  - 법무연수원**: Institute of Justice
  - 사학연금**: 사학연금 (Private Education Pension Insurance)
  - KIET**: 한국세라믹기술원 (Korea Ceramic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)
  - nipa**: 정보통신산업진흥원 (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)
  - OGBAS KOREAN FOUNDATION**: 해외동포재단 (Overseas Koreans Foundation)
  - KISA**: 한국인터넷진흥원 (Korea Internet & Security Agency)
  - 관세청**: 중앙관세분석소 (Central Customs Laboratory and Analysis Service)
  - ktl**: 한국산업기술시험원 (Korea Testing Laboratory)
  - TS**: 교통안전공단 (Traffic Safety Corporation)
  - 중앙119구조본부**: NETTING THE RESCUE HEAVEN SUPPORTS (Central 119 Rescue Headquarters)
  - 한국장학재단**: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- KOSAF
  - 한국저작권위원회**: KOREA COPYRIGHT COMMISSION
  - 공무원연금공단**: Civil Servants' Pension Insurance Corporation
  - DTAQ**: 국방기술품질원 (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)
  - KOREA KF FOUNDATION**
  - 한국감정원**: KOREA APPRAISAL BOARD
  - NPS**: 국민연금 (National Pension Service)
  - 관세국경관리연수원**: Customs Border Control Training Center
  - KPX**: 전력거래소 (Korea Power Exchange)



## □ 현재 : 집중화 폐해와空洞化 우려 속에 대립 · 갈등 관계

### ○ 수도권 : 점진적 규제 완화 속에 수도권의 集中 · 集積의 폐해 加重

- 영국 · 프랑스 · 일본의 수도권 규제완화 사례와는 相異
- 경기도의 그린벨트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· 유지는 별도

→ 수도권 年間 교통혼잡비만 30조, 환경개선비 등 고려시 과중한 비용 필요

### ○ 非수도권 : 수도권으로 기업 · 대학 이전 등 인구 감소, 공동화 우려

→ 수도권에 대한 대립 · 갈등 시각 확대, 地域活力 저하 등 부작용

## □ 改善 : 수도권과 非수도권 균형 · 조화 · 상생 強化

### ○ 단기적 개발이익 추구 보다 장기적인 균형발전 정책 강화, 발전이익 공유

### ○ 수도권은 예외적 규제완화로 제한된 특별한 개발수요 충당, 非수도권 발전 力量強化 중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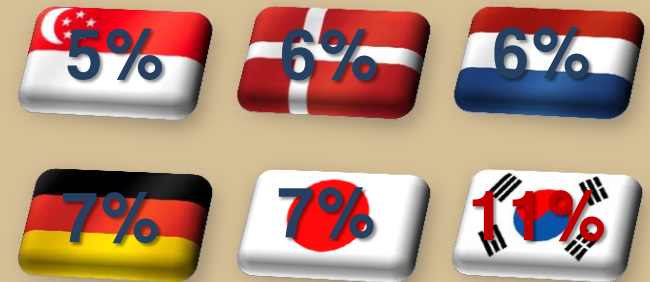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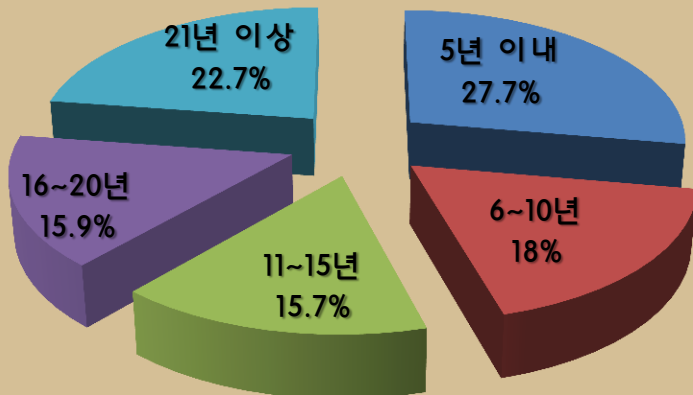
### ○ 「동북아시대」라는 큰 틀에서, 수도권 · 非수도권의 二元的 구근에 의한 양극화 지양

# 전국 상수도 관로 노후화 및 누수 실태

국회의원 이명수  
www.mslee.co.kr

- 전국 상수도관 총 156만km 중 3만5천km(23%)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
- 노후관, 수돗물 악취 등 냄새·흐리고 탁한 녹물 발생의 주 원인
- 지난 10년간 노후 수도관 누수량 84억m<sup>3</sup>, 재정손실액 약 5.9조원
- 재정 열악 지자체, 관망개선 부진 ⇨ 누수손실 가중 ⇨ 재정 악화 ‘반복’

## ▶ 지방·광역상수도 수도관 노후화 현황



- ➡ 기후변화 따른 수자원의 과학적·효율적 관리 및 공영화 강화 필요
- ➡ 재정 열악 지자체 고려한 ‘노후 상수도관’ 개선에 정부차원 지원



- 정부와 공사, '인천국제공항 허브정책'에만 집중 경향
  -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(총사업비 약 5조원, '17년 완공목표) 진행 중
- 일본, '허브공항(항공사中心), 셔틀공항(승객中心)' Duel System 가속화
  - 승객중심 위해 '10년 하네다공항 확장 완료, 단거리 국제선 강화
- 중국, 북경·상해·광저우 대도시권 2개 공항 시스템 집중하여 현실화
  - 현재 158개 공항, '20년 244개로 공항 증설 통해 승객 편의 집중



➡ 단거리 국제선 승객 편의 위한 **수도권(김포)공항 효율성 강화 필요**

➡ **TSR, TCR, TKR 연결 · 조사 · 연구 ‘미흡’ 중 · 장기 비전 대비 필요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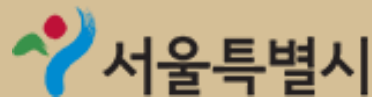
# 서울시 경전철 '무더기 건설 추진' 관련

국회의원 이명수  
www.mslee.co.kr

- 대중교통체계, 민자와 세금 투입하여 철도 중심으로 변경계획 발표
- 부채 감수, 10년內 경전철 9개노선(총 사업비 8조5천억원) 추진방침
- 재원, 국비 1조1723억원 · 시비 3조550억원 · 민자3조9494억원(46%)
- 사업추진 및 투자 우선순위 최종 확정 없이 무분별한 일방추진 불만도

## 〈국토부 입장〉

- 현재 서울시에서 국토부로 공식적 승인요청 미제출
- 승인요청 접수시 기재부 및 전문기관 등과 협의하여 검토 예정



➔ 국토교통부 차원의 **신중하고 철저한 검토 · 협의 필요**



# (준)대중교통수단 위생 상태 조치 관련

국회의원 이명수  
www.mslee.co.kr

-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「위생상태 기준」 관련 근거 없음
- 실제, 버스·택시·지하철·열차의 경우,
  - 좌석 등 청소·청결상태 불량, 환자 등 탑승시 질병 오염 우려

본 의원실, 2013.10.15.(화) 대중교통 위생 자체 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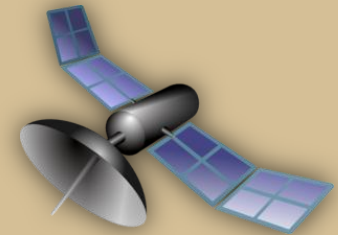


- ➡ 다수 승객, '불결'에 동의, '**위생청결기준**' 근거 마련 필요
-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, 위생점검, 청결상태 유지 필요

# 미래 디지털 자동차와 디지털 도로시대 대비

국회의원 이명수  
www.mslee.co.kr

- 전기 자동차,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상용화 임박. 첨단 무인 자동차 시대 예상
- 스마트 · 하이웨이 시대 도래 등 새로운 新기술 · 新기법 등 지속적 변화추세
- 단순 교통통과 공간 ▷ 문화창출 · 휴식 · 여가 등 종합적 복합공간으로 변모



➔ 관련 R&D 기능 強化, 미래 최첨단 교통수요시대에 적극 대응

- 버스 적자문제로 ‘01년 부터 프랑스 ‘샤토후’ 에서 「대중교통 무료 정책」 실시
- 12년이 지난 현재 버스 노선거리 45% 증가, 버스 승객 210% 증가
- 매표기 비용 절감, 9인 이상 고용주 교통분담금 부담으로 예산 충당
- 장점 :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로 대기오염 감소 및 도로환경 개선
- 단점 : 무료이다 보니 버스 탑승시 혼잡하다는 것과 자원 조달 문제 발생

“버스 요금 인상을 해서 적자를 면할 수 없다면 차라리 무료로 운영해 보자” (샤토후 市長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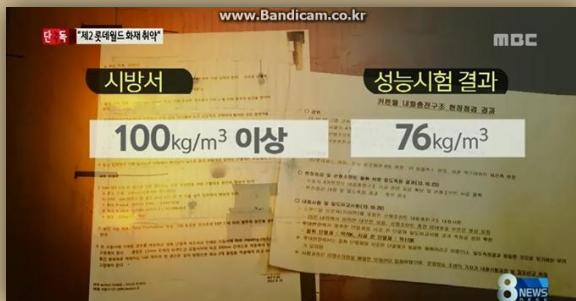
➡ 버스 운영 적자, 시내 혼잡 등을 해소할 교통정책, ‘발상의 전환’ 필요



# 초고층빌딩 “화재 취약” – 시공현장 전수조사 필요

국회의원 이명수  
www.mslee.co.kr

- 초고층빌딩 공사현장 샘플조사 결과 ‘시방서(적법) 따로, 시공(불법) 따로’
- 외벽과 층간 사이를 메우는 내화충전재(선형조인트) ‘화재 취약’
- 내화충전재 관련, 성능 기준 · 공식 국가성능시험기관 선정 등 제도 마련 시급



➡ 제대로 된 제품 선정 · 시공 위해 철저한 관리 · 감독 시스템 마련 시급